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손 병 돈*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훨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빈곤율을 겨우 0.6~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1. 서론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이하 IMF 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수준의 실질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IMF 위기 이전에 한국의 실업률은 2~3% 수준의 완전고용 내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IMF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년 상반기에는 8%를 넘기에 이르렀다. 실질소득도 IMF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에는 전년대비 6.7% 포인트 하락을 경험하였다(통계청, 1999). 실업률의 급증과 실질소득의 감소는 빈곤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은 3.0% 수준이었으나, IMF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1998년도 3/4분기에는 7.5%수준에까지 이르렀다(문형표·유경준, 1999: 5).

이러한 고실업 상황의 지속과 빈곤의 급증이라는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각종 실업대책과 빈곤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실업 및 빈곤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실업 및 빈곤자의 대다수가 그 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실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실직자들이 정부의 실업대책으로부터 혜택받는 정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실직자 중 86.2%가 정부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능후, 1999).

이처럼 실업자들과 빈곤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크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이들 집단의 생존권적 요구는 심각한 사회적 투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 복지의 완충효과라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상부상조의 전통에 기반한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사적 소득이전이 IMF 이후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의 생계유지에 일정정도 기여함으로써, 이들 가구들의 생존을 돕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설에 대한 하나의 검증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사적 소득이전이 IMF 위기 이후의 빈곤문제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사적 소득이전이 한국의 빈곤율을 얼마나 낮추고 있고, 또한 어느 계층의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로 1996년, 1997년, 1998년 연간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99년 8월에 실시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구 중 약 5,50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매달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상세하게 소득항목과 소비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구라 할지라도 농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과 소득항목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된다는 점이 자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의 분석은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실업가구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하여 약 3만 가구에 대해 판별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가구 2,771가구, 비실업가구 1,567가구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이다.

2.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비공식 복지의 상대적 발달

우리나라의 국가복지의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996년도 의 경우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약 3.5%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993년 현재 GDP의 20% 이상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점(김성한, 1998: 101)과 대비될 뿐만 아니라 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거나

비슷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의 절반 내지 그 이하에 불과하다(김상균·손병돈, 1995: 210).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국가복지의 수준이 열악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을 들 수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1961년 이후 근 30년간 권위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경제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왔고, 따라서 사회복지와 같은 분배정책을 경시하여 왔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정부의 집권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폭압적인 방법으로 억압하여 왔다는 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급속한 자본주의화 과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어 옴으로써 복지욕구의 많은 부분을 가족에 의해 해결하여 왔고, 또한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의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 의한 국가복지의 저조한 발달은 민간복지의 상대적인 발달을 가져왔다. 국가복지에 비해 민간복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은 기업복지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복지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적인 사회복지 주체들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도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요 생계수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친척이나 친지, 이웃 등 비공식적인 복지주체의 도움을 응답한 가구가 12.8%인데 반해, 종교단체(사회단체)의 도움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2%에 불과하다(정경배 외, 1999). 현재까지 비공식 복지가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은 1992년도 도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사적 이전소득이 국가복지에 의한 이전소득의 5.6배에 이른다(김기덕, 손병돈, 1995)는 사실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전체 소득의 50% 내외가 사적 이전소득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수춘 외, 1995; 이가옥 외, 1994; 하윤숙, 1999).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복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적 소득이전과 같은 비공식 복지는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근원·김태성, 1995). 그 근거로 사적 소득이전의 대부분이 가족간에 이루어지므로, 1) 경제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가족보다는 부유한 가족들간에 활발하다는 점과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간의 공동체적 결속관계 등

의 사회적 자본에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 적거나 전혀 없다는 점(김상균·홍경준, 1997)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몇몇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Cox, 1987; Cox and Raines, 1985; 김기덕·손병돈, 1995).

하지만 몇몇 실증적인 연구들은 앞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McGarry와 Schoeni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간 소득이전의 계층별 분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간 소득이전으로부터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계층은 5계층 중 중하계층인 2분위 계층이고, 혜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이며, 다음으로 혜택이 적은 계층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McGarry & Schoeni, 1995).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간 소득이전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은 중하계층인 2계층, 다음이 중간계층인 3계층, 그리고 혜택을 가장 적게 보는 계층이 최상계층인 5계층, 다음으로 혜택을 적게 보는 계층이 최하계층인 1계층으로 분석되었다(손병돈, 1998a).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적 소득이전과 같은 비공식 복지의 혜택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극빈층에게는 그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적다는 것이지, 극빈층의 생활에서 사적 소득이전과 같은 비공식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총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저소득층의 생활유지에 사적 이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Butz and Stan, 1982).

사적 소득이전과 같은 비공식 복지의 또 다른 특성은 개별 가구에게 주어지는 절대량이 대체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간 소득이전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제공자의 경제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손병돈, 1998b). 이는 가족간 소득이전을 제공할 때, 자신의 생활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이전을 제공하

1) 미국의 경우 사적 소득이전의 대부분이 부모와 자녀 및 그 형제들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Gusio & Jappelli, 1991).

는 사람의 소득이 아주 많지 않는 한, 사적 소득이전 제공액이 상당히 클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

여기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들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소득²⁾의 규모를, 공적 이전소득³⁾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표 1>은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IMF 전후로 사적 이전소득의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통해 우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과 1997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의 약 24%가 월평균 약 22만 원의 사적 소득이전을 받고 있고, 1998년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약 39%가 월평균 약 11만 6,000원의 사적 이전을 수혜하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흥미로운 점은 IMF 위기 이후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사적 이전 수혜가구의 비율은 IMF 이후 약 15% 정도 증가하였다.⁴⁾ 이러한 사실은 IMF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 등 비공식 주체들이 상호원조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2>는 IMF 이후의 실업가구⁵⁾를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율을 실업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표 2>를 보면, 실업 이후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받는

-
- 2) 도시근로자 가구 분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란 도시가계조사의 '사적 보조금' 항목을 말하는데, 이는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생계 또는 교육비 보조 성격의 보조금을 가리킨다. 그리고 실업가구 분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란 부모, 형제, 기타 친·인척, 이웃으로부터 현금, 현물 형태로 도움받은 금액을 말한다.
 - 3) 도시가계조사에서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 보조금' 항목의 소득을 말하고, 이는 각종 연금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각종 급여의 소득을 의미한다. 실업조사자료에서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항목 중 사회보험급여 소득을 가리킨다.
 - 4) 1998년도에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율이 그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이 1998년도에 개편되었다는 점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추출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고, 사적 보조금 항목의 조사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본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부적절하다.
 - 5) 여기서 실업가구는 IMF 이후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실직한 가구를 말한다.

〈표 1〉 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의 추이

단위 : 원, %

	1996년	1997년	1998년
경상소득	1,886,853	2,002,954	1,844,545
사적 이전소득	53,606 (223,256) ¹⁾	55,025 (228,406) ¹⁾	45,375 (115,677) ¹⁾
사적 이전소득/경상소득	2.95 (12.29) ¹⁾	3.01 (12.48) ¹⁾	2.94 (7.49) ¹⁾
사적 소득이전 수혜가구 /전 도시근로자 가구	24.0	24.1	39.2

주 : 1)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2〉 실업가구 중 실업전후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율

단위 : %

	실업전 이전소득				실업후 이전소득				
	현금	현금, 현물 모두	현물	계	현금	현금, 현물 모두	현물	계	
이전소득가구 /전체 실업가구	2.2	1.0	3.4	6.6	7.4	5.6	3.9	16.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직 전에는 현금, 현물 등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6.6%였는데, 실직 이후 그 비율이 16.9%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실직 이후 현금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은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가 공적 이전소득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 1998년도의 경우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는 평균적으로 월 약 45,000원의 사적 이전소득을 갖는 데 반해, 공적 이전소득은 약 8,000원으로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보다 약 5.6배 많다. 수혜가구의 비율도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가 공적 이전소득 수혜가구보다 약 10배나 많다.

〈표 4〉는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적 현금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해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라

는 것을 <표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적 이전소득은 전 실업가구의 12.9%가 수혜하는 데 반해, 공적 이전소득은 전 실업가구의 2.4%만 수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가 공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보다 약 5.4배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보다 약 3.1배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는 공적 이전소득의 규모보다 훨씬 클 뿐 더러,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비교

단위 : 원, %

연 도	경상소득	사적 이전소득 ¹⁾			공적 이전소득 ²⁾		
		절대액	사적 이전소득/경상소득	수혜 가구 비율	절대액	사적 이전소득/경상소득	수혜 가구 비율
1996	1,886,853	53,606 (223,256)	2.95 (12.29)	24.0	8,340 (257,263)	0.39 (11.88)	3.2
1997	2,002,954	55,025 (228,406)	3.01 (12.48)	24.1	10,714 (287,446)	0.45 (11.98)	3.7
1998	1,844,545	45,375 (115,677)	2.94 (7.49)	39.2	8,089 (202,549)	0.46 (11.39)	4.0

주 : 1) ()는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

2) ()는 공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4> 실업가구 대상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비교

단위 : 만 원, %

사적 이전소득(현금) ¹⁾				공적 이전소득(현금) ²⁾			
총소득 (만 원)	수혜율 (%)	절대액 (만 원)	사적이전소득 /소득(%)	총소득 (만 원)	수혜율 (%)	절대액 (만 원)	공적이전소득 /소득(%)
64.6 (43.0)	13.1	4.7 (35.9)	7.3 (83.5)	64.6 (95.9)	2.4	1.5 (61.7)	2.3 (72.6)

주 : 1) ()는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

2) ()는 공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값.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4.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분석

여기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실업가구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소득이 빈곤율을 얼마나 낮추며, 또한 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의 하락정도를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도시근로자 가구

이 연구에서 빈곤선은 상대적 빈곤선으로 많이 이용되는 평균소득의 50% 수준과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199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0%인 92만 2,273원과, 중위소득의 50%인 83만 5,937원을 빈곤선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러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근로자 가구 대상 소득형태별로 빈곤율을 추정한 것이 <표 5>이다.

<표 5>를 보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으로 빈곤율을 추정했을 때, 평균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설정할 때는 빈곤율이 18.7%였고, 중위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설정할 때는 빈곤율이 15.9%로 추정되었다.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빈곤율은 각각 16.8%, 14.1%로서 사적 이전은 빈곤율을 각각 1.9% 포인트, 1.8% 포인트 정도 낮추었고,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율은 각각 9.9%, 10.9%였다. 이러한 수치는 1983년도 미국에서 현금공공부조에 의한 빈곤감소율이 3.4%, 현금 사회보험소득에 의한 빈곤감소율이 33.7%였다는 점(Danziger, Haveman and Plotnick, 1986: 65)

<표 5> 소득형태별 빈곤율 비교

단위: %, ()는 사례수

	빈곤율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로 빈곤선 설정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로 빈곤선 설정
소득(1) (3,230)	18.7(604)	15.9(513)
소득(2) (3,230)	16.8(544)	14.1(457)
소득(3) (3,230)	18.4(594)	15.5(502)

주: 소득(1) : 경상소득 - 이전소득, 소득(2) : 소득(1) + 사적 이전소득; 소득(3) : 소득(1) + 공적 이전소득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8.

〈표 6〉 사적 이전의 상대적 빈곤완화 효과(사적 이전수혜 가구만 대상)

단위: %, ()는 사례수

	빈곤율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로 빈곤선 설정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로 빈곤선 설정
소득(1) (1,267)	22.7(288)	20.0(253)
소득(2) (1,267)	18.0(228)	15.5(197)

주 : 소득(1) : 경상소득 - 이전소득, 소득(2) : 소득(1) + 사적 이전소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8.

을 고려할 때, 그다지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적 이전의 빈곤완화효과는 공적 이전에 의한 빈곤을 하락 정도(0.3% 포인트 하락) 보다 6 배나 큰 것이다.

〈표 6〉은 사적 이전을 받는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형태별로 빈곤율을 추정한 것이다. 사적 이전은 평균소득의 50%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을 4.7% 포인트, 중위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설정시 빈곤율을 4.5% 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적 이전을 받는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율이 20.8%, 37.9%에 이를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주로 어떤 소득계층에서 발생하고, 어떤 계층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다음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표 7〉은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를 계층별로 비교한 것이다.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계층은 빈곤선과의 소득격차가 가장 적은 저소득층인 하위 11~20% 계층⁶⁾으로 사적 이전에 의해 빈곤율이 각각 13.9% 포인트, 12.1% 포인트 떨어졌다. 다음으로 빈곤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계층은 하위 6~10% 계층으로 사적 이전은 빈곤율을 각각 9.3% 포인트, 10.5% 포인트 낮추고 있다.

6) 하위 5% 계층은 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이 42만 2,383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고, 6~10% 계층은 42만 2,384원에서 63만 1,872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다. 11~20% 계층은 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이 631만 8,723원에서 95만 5,025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다.

〈표 7〉 소득계층별 사적 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비교

단위 : %, ()는 사례수

계 층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소득(1)	소득(2)	소득(3)	소득(1)	소득(2)	소득(3)
하위 5% (161)	100.0 (161)	98.8 (159)	100.0 (161)	100.0 (161)	98.1 (158)	100.0 (161)
6~10% (162)	100.0 (162)	99.4 (161)	90.7 (147)	100.0 (161)	99.4 (161)	89.5 (145)
11~20% (323)	87.0 (281)	84.8 (274)	73.1 (236)	58.81 (90)	56.7 (183)	46.7 (151)
21% 이상 (2,584)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전 체 (3,230)	18.7 (604)	18.4 (594)	16.8 (544)	15.9 (513)	15.5 (502)	14.1 (457)

주 : 1) 소득계층은 경상소득에서 이전소득을 뺀 소득으로 구분.

소득(1) : 경상소득-이전소득, 소득(2) : 소득(1) +공적 이전소득, 소득(3) : 소득(1) + 사적 이전소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8.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하위 5%는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를 계층별로 비교한 것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계층은 저소득층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하위 11~20%계층으로 사적 이전에 의해 빈곤율이 각각 20.2% 포인트, 26.2% 포인트나 떨어졌다. 다음으로 빈곤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계층은 하위 6~10%계층으로 사적 이전은 빈곤율을 각각 17.2% 포인트, 19.5% 포인트 낮추고 있다.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은 사적 이전이 빈곤을 전혀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완화는 빈곤선으로부터 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은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빈곤선과의 소득격차가 큰 극빈층에서는 빈곤완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왜 극빈층에서는 사적 이

〈표 8〉 사적 이전의 빈곤완화 효과(사적 이전 수혜가구만)

단위 : %, ()는 사례수

계 층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 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 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소득(1)	소득(2)	소득(3)	소득(1)	소득(2)	소득(3)
하위 5% (72)	100.0(72)	100.0(72)	100.0(72)	100.0(72)	98.6(71)	100.0(72)
6~10% (87)	100.0(87)	98.9(86)	82.8(72)	100.0(87)	98.9(86)	80.5(70)
11~20% (149)	86.6(129)	83.9(125)	56.4(84)	63.1(94)	60.4(90)	36.9(55)
21% 이상 (959)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1,267)	22.7(288)	22.3(283)	18.0(228)	22.0(253)	19.5(247)	15.5(197)

주 : 1) 소득계층은 경상소득에서 이전소득을 뺀 소득으로 구분.

소득(1) : 경상소득-이전소득, 소득(2) : 소득(1) + 공적 이전소득, 소득(3) : 소득(1) + 사적 이전소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8.

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까? 〈표 9〉는 일정정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표 9〉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평균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수혜율 및 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9〉를 보면,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계층이 다른 저소득층인 하위 6~10% 계층과 하위 11~20% 계층보다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비율 및 사적 이전 수혜액이 적다. 이처럼 극빈층이 다른 저소득층보다 사적 이전으로부터 혜택이 적다는 사실이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다른 계층보다 극빈층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극빈층에서 발생하지 않는 더 큰 이유는 사적 이전이 갖는 근본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를 보면, 사적 이전으로부터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계층은 하위 6~10%계층으로, 이 계층의 가구들은 약 54%가 사적 이전을 수혜하고, 전가구 평균 및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들의 평균 사적 이전수혜액도 각각 월평균 약 9만 원, 약 17만 원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계층은 하위 6~10%계층이 아니라 하위 11~20%계층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적 이전이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소득을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

〈표 9〉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사적 이전소득, 소득대비 사적 이전소득과 수혜율

단위: 원, %, ()는 사례수

	전 체				사적 이전수혜 가구만		
	경상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수혜율	경상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하위 5% (161)	315,671	45,039	11.8	44.7	364,794	100,712	25.8
6~10% (162)	627,280	90,605	9.4	53.7	709,680	168,712	17.6
11~20% (323)	869,560	55,052	5.1	46.1	929,297	119,340	11.0
21% 이상 (2,584)	2,137,991	41,351	1.7	37.1	2,132,856	111,420	4.7
전 체 (3,230)	1,844,545	45,375	2.9	39.2	1,793,119	115,677	7.5

주: 소득계층은 경상소득에서 이전소득을 뺀 소득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8.

며, 따라서 빈곤선과의 소득격차가 큰 경우에는 사적 이전에 의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극빈층에서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극빈층의 소득이 사적 이전에 의한 이전소득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표 9〉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다른 저소득층보다 극빈층이 사적 이전으로부터의 혜택은 적지만,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적 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하위 5%에 속하는 계층의 가구들은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평균 약 12%로 가장 높고,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은 약 26%에 이르며 역시 가장 높다.

〈표 10〉은 빈곤정도별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평균 사적 이전수혜액, 사적 이전수혜율 및 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10〉 역시 〈표 9〉와 비슷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극빈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소득의 25% 이하에 속하는 계층의 가구들은 빈곤층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위소득의 26~

〈표 10〉 빈곤정도별 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

단위 : 원, %

	전 체				사적 이전수혜 가구만		
	경상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수혜율	경상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중위소득의 25% 이하 계층(109)	241,998	45,875	14.1	45.9	297,587	100,008	29.9
중위소득의 26%~ 50% 계층(244)	601,822	74,047	8.3	51.5	676,654	143,392	16.1
중위소득의 51% 이상 계층(2,877)	2,010,656	42,925	2.1	37.9	1,990,599	113,194	5.5
전 체	1,844,545	45,375	2.9	39.2	1,793,119	115,677	7.5

주 : 계층구분은 경상소득에서 이전소득을 뺀 소득으로 구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8.

50% 계층의 가구들보다 사적 이전수혜액 및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낮다. 하지만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가장 적은 중위소득 25% 이하에 속하는 계층의 가구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현재의 생활유지에서 사적 이전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2) 실업가구 대상

여기서는 경제위기 이후 실직한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표 11〉은 전체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소득형태별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1〉을 보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인 소득 (1)을 기준으로 할 때, 실업가구의 전체 빈곤율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설정시 73.6%이고, 중위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설정시 71.4%이다. 〈표 11〉에서 세번째 줄(소득 2)은 앞의 소득 (1)에 사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에 빈곤율을 추정한 것이다. 소득 (2)의 빈곤율은 평균 소득 기준시 71.5%, 중위소득 기준시 69.1%로 사적 이전에 의해 실업가구의 빈곤율이 각각 2.1% 포인트, 2.3% 포인트 하락하였다(빈곤감소율은 각각 2.9%, 3.3%).

이러한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소득 (3) 기준시(공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보다는 크다. 하지만 앞의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처럼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표 12〉는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실업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하기 전후로 빈곤율은 평균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할 경우, 87.0%에서 70.8%로, 중위소득의 50%로 빈곤선을 설정할 경우 84.1%에서 66.3%로 변화하였다. 즉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빈곤율을 각각 16.2% 포인트(빈곤감소율은 18.9%), 17.8% 포인트(빈곤감소율은 21.1%) 감소시킬 정도로 빈곤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적 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실업가구 전체 대상)

단위 : %, ()는 사례수

	빈곤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로 빈곤선 설정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로 빈곤선 설정
소득(1) (2,412)	73.6(1776)	71.4(1723)
소득(2) (2,412)	71.5(1725)	69.1(1667)
소득(3) (2,412)	72.8(1756)	70.5(1701)

주 : 소득(1) : 월평균 소득-이전소득. 소득(2) : 소득(1) + 사적 이전소득. 소득(3) : 소득(1) + 공적 이전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표 12〉 사적 이전의 상대적 빈곤 완화 효과(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실업가구)

단위 : %, ()는 사례수

	빈곤율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로 빈곤선 설정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로 빈곤선 설정
소득(1) (315)	87.0(274)	84.1(265)
소득(2) (315)	70.8(223)	66.3(209)

주 : 소득(1) : 월평균 소득-이전소득. 소득(2) : 소득(1) + 사적 이전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표 13〉, 〈표 14〉는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주로 어떤 소득계층에서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소득계층별⁷⁾로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13〉을 보면, 사적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하위 20% 계층의 경우 사적 이전은 빈곤율을 0.6% 포인트를, 소득이 매우 낮은 21~40% 계층의 경우에는 0.7% 포인트, 1.0% 포인트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빈곤층이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40~60% 계층의 경우는 사적 이전이 빈곤율을 5.1% 포인트, 6.4% 포인트를, 61~80% 계층의 경우는 3.7% 포인트, 2.5% 포인트를 하락시켜,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극단적으로 낮은 빈곤층보다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빈곤층에서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표 14〉는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실업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적 이전의 빈

〈표 13〉 소득계층별 사적 이전의 빈곤완화 효과(실업가구 전체)

단위: %, ()는 사례수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 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 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소득 1	소득 2	소득 1	소득 2
하위 20% 이하 (659)	100 (659)	99.4 (655)	100 (659)	99.4 (655)
21~40% (297)	100 (297)	99.3 (295)	100 (297)	99.0 (294)
41~60% (590)	100 (590)	94.9 (560)	100 (590)	93.6 (552)
61~80% (403)	54.3 (219)	50.6 (204)	41.2 (166)	38.7 (156)
81~100% (463)	2.4 (11)	2.4 (11)	2.4 (11)	2.2 (10)
계 (2,412)	73.6 (1,776)	71.5 (1,725)	71.4 (1,723)	69.1 (1,667)

주: 소득계층은 사적 이전을 제외한 총소득으로 구분.

소득(1): 월평균 소득-이전소득, 소득(2): 소득(1)+사적 이전소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7) 하위 20% 계층은 사적이전을 제외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이고, 21~40% 계층은 3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며, 41~60% 계층은 30.1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다. 61~80% 계층은 사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60.1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고, 81~100% 계층은 100.1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다.

〈표 14〉 소득계층별 사적 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사적 이전소득 있는 실업가구)

단위 : %, ()는 사례수

	평균소득의 50% (92만 2,273원)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83만 5,937원)로 빈곤선 설정시 빈곤율	
	소득 1	소득 2	소득 1	소득 2
하위 20% 이하 (96)	100.0 (96)	95.8 (92)	100.0 (96)	95.8 (92)
21~40% (77)	100.0 (77)	97.4 (75)	100.0 (77)	96.1 (74)
41~60% (78)	100.0 (78)	61.5 (48)	100.0 (78)	51.3 (40)
61~80% (40)	55.0 (22)	17.5 (7)	32.5 (13)	7.5 (3)
81~100% (24)	4.2 (1)	4.2 (1)	4.2 (1)	0.0 (0)
계 (315)	87.0 (274)	70.8 (223)	84.1 (265)	66.3 (209)

주 : 소득계층은 사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으로 구분.

소득 (1) : 총소득 - 공적 이전소득. 소득 (2) : 소득 (1) + 사적 이전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곤감소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14〉에서도 앞의 〈표 13〉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율의 하락 정도가 더 클 뿐이다.

〈표 15〉, 〈표 16〉은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계층별로 사적 이전소득 수혜액, 수혜율 및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이 표들은 극빈층 실업가구에서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왜 거의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15〉를 보면, 하위 21~40% 계층의 사적 이전수혜액이 가장 많고, 수혜율도 가장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 계층에서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41~60% 계층, 61~80% 계층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극히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근로자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가구에게 제공되는 사적 이전소득의 절대량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그 결과 소득이 극히 적은 극빈층의 경우 사적 이전을 통해 빈곤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소득이 낮은 빈곤층일수록 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적 이전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를 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 계층의 경우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소득이 다음으로 적은 21~40% 계층의 경우도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52%에 이를 정도로, 이들

〈표 15〉 소득계층별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만 원, %

	전 체				사적 이전수혜 가구만		
	총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총소득	수혜율	총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총소득
하위 20% (659)	4.3	4.3	1 ¹⁾	14.6	29.5	29.5	1.00
21~40% (297)	27.7	6.6	13.5	23.9	44.8	25.4	52.0
41~60% (590)	60.9	5.4	4.8	13.2	95.4	41.4	36.5
61~80% (403)	94.0	3.8	2.6	9.9	129.5	37.8	25.9
상위 81~100% (463)	177.9	3.8	1.4	5.2	247.3	73.5	26.5
전 체 (2,412)	69.3	4.7	8.8	13.1	78.8	35.9	57.5

주 : 소득계층은 총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을 뺀 소득으로 구분.

1) 전체 659사례 중 563 사례가 총소득이 0원으로 나타나, 총소득이 0인 사례를 제외한 116 사례의 평균값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표 16〉 빈곤정도별 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 (실업가구 대상)

단위 : 만 원, %

	전 체				사적 이전수혜 가구만		
	총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총소득	수혜율	총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총소득
중위소득 ¹⁾ 의 25% 이하 계층(824)	7.6	4.8	47.6 ²⁾	17.8	31.7	26.9	84.5
중위소득의 26% ~ 50% 계층(932)	62.7	5.0	4.8	13.2	91.3	37.5	36.4
중위소득의 51% 이상 계층(656)	156.3	4.1	1.8	6.7	201.2	61.2	27.1
전 체 (2,412)	69.3	4.7	8.8	13.1	78.8	35.9	57.5

주 : 1) 중위소득은 199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중위소득을 말함.

2) 총소득이 0원인 563사례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값.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계층의 현 생활은 사적 이전에 대한 의존 정도가 매우 높다.

〈표 16〉에서도 〈표 15〉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소득 2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계층이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사적 이전의 수혜액도 중위소득 26~50% 계층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중위소득의 2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 전체의 경우 평균 약 48%에 이르고, 이 계층에서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85%에 이르며, 이는 다른 계층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적 소득이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중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약 39%로 공공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보다 약 10배나 높으며, 평균적인 수혜액도 공공이전보다 5.6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율이 공적 이전수혜 가구의 비율보다 약 5.4배 높으며,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공적 이전소득보다 약 3.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비교적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율은 20.8%, 37.9%에 이르고,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실업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율은 18.9%, 21.1%에 이른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하였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선과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계층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은 하위 11~20% 계층의 빈곤율을 13.9% 포인트, 12.1% 포인트 떨어뜨리며, 실업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은 하위 44~60% 계층의 빈곤율을 5.1% 포인트, 6.4% 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의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5% 계층의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12%,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25.6%에 이르고 있다.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1~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사적 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을 일정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극빈층의 빈곤완화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므로, 극빈층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복지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 IMF 경제위기를 벗어날지라도 예전과 같은 완전고용은 기대하기 어렵고, 상당 수준의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극빈층의 비율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공공 부조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김기덕·손병돈. 1995. "1982~1992년간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 변화 추세." 《사회복지연구》 제 6 호. pp.91~115.
- 김상균·손병돈. 1995.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 한국형 복지모형의 모색." 《정책논단》 제2 권 2호. 한국외교문제연구원. pp.199~228.
- 김상균·홍경준. 1997. "한국 복지체제는 지속가능한가 : 공동체적 결속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연구》 제10호. pp.49~85.
- 김성한. 1998. "사회복지 재정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pp.82~103.
- 김수춘 외. 1995.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형표·유경준. 1999. "실업, 복지대책의 향후 운용방향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제146호.
- 박능후. 1999. "사각지대 실업자집단 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3호.
- 손병돈. 1998(a). "가족간 소득이전의 경제적 계층별 분배." 《사회보장연구》 제14권 1호. pp.157~187.
- _____. 1998(b).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 부모와 기혼자녀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근원·김태성. 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
- 이가옥 외. 1994. 《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배 외. 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1999. 《1998 도시기계연보》.
- 하윤숙. 1999. "사적 소득이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tz, William P. and Peter J. E. Stan. 1982. "Interhousehold Transfers and Household Structure in Malay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8. pp.92~115.
- Cox, Donald and F. Raines. 1985. "Interfamily Transfers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M. David and T. Smeeding(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niverty of Chicago Press. pp.393~421.
- Cox, Donal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 46.

- Danziger, Sheldon H. et al. 1986. "Antipoverty Policy : Effects on the Poor and the Nonpoor." Sheldon H. Danziger and Daniel H. Weinberg. *Fighting Poverty*. Harvard University Press. pp.50~77.
- Gusio, Luigi and Tullio Jappelli. 1991. "Intergeneration Transfers and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35. pp.103~120.
- McGarry, Kathleen and Robert F. Schoeni. 1995. "Transfer Behavior in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XXX. pp.S185~S226.

The Effect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Reducing Poverty in Korea

Son, Beyong Don

(Pyongtaek Univ. Social Welfare)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to analyze how many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decrease poverty rate, to compare the effect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decreasing poverty rate with income classes. This study has utilised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o estimate the poverty ratio in urban areas and Unemployment Household Survey whi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as investigated at 1998.

Majour findins are these.

First, Sizes of private transfers incomes are much than that of public transfers incomes. The rates in receiving private transfers income are ten times higher than that in receiving public transfers income among urban worker's household. The mean of private transfer income are about six times larger than that of public transfer income among urban worker's household.

Second, the effect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reducing poverty rates are not

large. After private transfers, urban workers' households are about 10 per cent away from its poverty line, and unemployed households are only 3 per cent away from its poverty line.

Third, especially, private income transfers are hardly reducing poverty rates among extreme poverty class. After private transfers, urban workers' households which their incomes are within low 5%, are not away from its poverty line at all.